



주간통일정세 2010-34(2010.08.16~08.2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승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34



## 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 北, 김정은 배지·초상화 대량 제작(8/16, 열린북한방송)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배지와 초상화를 대량 제작해 놓고 있음.
- 방송은 '북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북한 만수대창작사 1호 창작실이 지난 4월 말 상부의 지시를 받아 김정은 초상회장(배지)과 초상화를 대량 제작했다"면서 "이르면 내달 당대표자회에서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 김정은 배지를 선물로 나눠줄 수 있다"고 말함.
-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의 최고 창작단체로 작가, 종업원 등 구성원이 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방송은 또 "김정일 초상화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1980년대 초반부터 공식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김정일 배지의 경우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부터 공식 허용됐지만 일부 간부들만 달았고, 일반 주민들은 현재도 김일성 배지를 주로 단다"고 덧붙임.

##### ● 北김정일 '산울림' 공연관람(8/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만에 공개활동에 나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경희극 '산울림' 공연을 관람
- 김 위원장은 '산울림'에 대해 "시대의 명작"이라고 찬양하면서 "창작가, 예술인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충 발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경희극 '산울림'과 같은 명작들을 더 많이 창조하여 강성대국 건설대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밝힘.
- 공연 관람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리명수와 곽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
- 김 위원장은 국립연극단이 재창작한 '산울림'을 4월 27일 처음으로 관람한 후 중국 방문(5/3~7) 직후인 9일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관람

##### ● 北김정일 지시 회령시 개발사업 2년째 지지부진(8/18, 자유아시아방송(RFA))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모 김정숙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에 '음식점 거리'를 조성하라고 지시했으나 자금난으로 2년째 지지부진한 상태



- 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 사업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작년 2월 24일 김정숙의 고향 회령을 생애 처음 방문했을 때였음.
  - 방송은 '회령시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은 직접 철근과 시멘트 공급 대책을 세워주고, 음식점들의 내·외장재 구입 자금으로 미화 80만 달러를 회령시 당 책임비서한테 내려보낼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고 말함.
  - 북한 조선중앙TV는 작년 8월 이 사업을 소개하면서 "전문식당 7곳 이 회령 음식점거리에 새로 들어서고 오산덕온반집 등 9개 식당이 새로 개건(리모델링)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음.
  - 김 위원장의 특별지시로 비상이 걸린 회령시는 지난해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벌인 '150일 전투'(대중노력동원, 4/20~9/16) 기간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인민반 부녀자들까지 동원해 공사에 매달렸으나 목표 시점까지 절반도 진척시키지 못함.
  - 함경북도 당국은 이와 별도로 회령에 새로 들어설 음식점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조건으로 중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려 했으나 이 또한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전해짐.
  - 회령시 소식통은 "인구 13만에 볼거리도 없는 변경도시에 음식점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은 중국인들의 비웃음만 샀다"면서 "완전 개방된 라진-선봉에도 투자를 꺼리는 중국인이 회령시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
  - 회령시는 할 수 없이 완공 목표시점을 올해 8월 15로 1년 가까이 늦췄고, 급기야 올 4월에는 인민군의 군수물자 조달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8총국'(군수동원총국) 산하 1개 여단이 '음식점거리' 공사에 긴급 투입됐으나 자금난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함.
  - 다른 회령시 소식통은 RFA에 "김 위원장이 보태준 80만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해 회령 인근에서 많이 나는 몰리브덴 원석과 옥돌 가공품까지 중국쪽에 내다 팔았지만 자금난을 풀지 못했다"면서 "자금부족으로 자재가 제때 조달되지 않다 보니 지금도 내·외장 공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 **北김정일 함흥 서호초대소서 2주간 정밀검진(8/20, 열린북한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 2~14일 함경남도 함흥의 서호초대소로 프랑스 의료진을 불러 뇌혈관과 중추신경 계통의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방송은 전함.
  - 이 방송은 '북한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프랑스 의사 두 명이 김 위원장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서호초대소를 방문했다"면서 "이들 의사는 2008년 8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치료를 맡았으며, 이번엔 호위사령부 의료진과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뇌혈관계, 중추신경계 검사를 했다"고 밝힘.
  - 이어 "이번 검진은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면서 “폭염과 호우가 교차하는 날씨에 김 위원장의 건강을 우려한 호위사령부 특별의료진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고위급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김 위원장은 여름휴가를 량강도 삼지연초대소에서 보낸다”면서 “하지만 올해엔 건강검진의 목적이 있어 삼지연과 기후가 비슷하고 프랑스 의료진이 이동하기도 편리한 서호초대소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

### ● 北박봉주 전 총리, 黨 제 1부부장으로 복권(8/21,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이날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최고 식당인 옥류관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사실을 전하면서 “박봉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고병섭 인민봉사총국 총국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보도
-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5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박봉주 전 총리 등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측근 20여명이 최근 1, 2년 사이에 복권됐다”면서 “2007년 기업에 시급제(時給制)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가 비판을 받아 좌천된 박 전 총리는 최근 장씨의 부인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인 김경희가 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경공업부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전한 바 있음.

#### ■ 김정일동향

- 8/17 김정일, 홍정주(평남 숙천군)·조정숙(강원도 문천시)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8/17, 중통)
- 8/18 김정일, 경희극 ‘산울림’ 관람(함흥대극장) 및 黨 名義 「감사」전달(8/18, 중통)
  -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김기남(黨비서), 김경희(黨부장), 현철해·리명수(국방총 국장들), 곽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 등 동행

####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8/16 안극태(평남 인민위원장) 등 참가下 현지에서 진행(8/17, 중통)
- 김일성 저작(은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발표(1990/8/18) 20돌 기념 평양시보고회,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기념보고) 등 참가下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8/17, 중통)
  - 김연대(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유미영(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강연학(조국전선 의장), 안경호(조평통 서기국 국장) 등 참가
- 訪北 한상렬목사, 귀환을 앞두고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8/18, 중통·평방)
-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업적에 관한 중앙연구토론회, 김기남(黨비



서) 등 참가下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8/19, 중방·중통)

- 이병환(軍 장령), 성자립(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차용명(김일성고급당학교장), 태형철(사회과학원장), 유영식(내각 부총리) 토론
- 訪北 한상렬 목사, 김영남과 담화(8/19, 중통)
- 안경호(6.15실천 북측위원장), 강영섭(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장) 배석

## 나. 경제

### ● 北, 상하이엑스포서 각국 정상 등장 우표 판매(8/17, 산케이신문)

- 북한이 상하이엑스포에서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방북했을 때 발행한 기념우표를 팔고 있음.
- 신문에 따르면 이중 ‘고이즈미 우표’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2002년 9월에 방북했을 때 발행한 것으로 상하이에서는 5종 한 세트를 중국 돈 80위안(약 1만3천900원)에 팔고 있음.
- 새 우표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된 우표도 팔고 있으며, 이 우표는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이나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 김 전 대통령 등이 방북했을 때 발행한 것들로 한 세트 가격은 ‘고이즈미 우표’와 마찬가지로 동일.
- 북한 판매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우표가) 하루에 수백장씩 팔린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 기타 (대내 경제)

- 제11차 전국 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 전하철(내각 부총리)·이자방(국가과학기술위원회)·김용진(교육총 위원장)·장철(국가과학원장) 등 참가下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8/16, 중통)
- 자강도·平北·咸南 등 각지 축산부문의 상반기 계획, 고기생산 118%, 알생산 139% 및 강계영예군인피복공장의 7/29 현재 연간경제계획 101% 달성(8/16, 중방)
- 용성기계연합기업소(咸南)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 준공식, 광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준공사) 등 참석下 김정일 「감사」전달 등 진행(8/17, 중방)
  - 김정일은 지난 8/3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선군주물공장 건설장 등을 현지지도 한바 있음.
  - 김영남, 김관희, 전하철, 강능수, 박수길, 조병주, 한광복, 내각 부총리들, 관계부문 일꾼 등 참석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산하 제남탄광, 2단계 벨트 콘베어 공사 완공 및 2개의 새 갱(坑) 조업(8/17, 중방)
- 北 국가우표발행국, 김정일의 黨사업(선군영도) 시작 50돌 즈음 기



① 北, 주력전차 ‘폭풍호’ 첫 공개(8/17, 연합뉴스)  
 - 최근 의학과학 중앙연구소 실장 리일훈의 간암·위암 등의 암 재발  
 과 전이 예방용 “효능높은 암약썬” 개발 선전(8/19, 중통)

#### 다. 군사

##### ① 北, 주력전차 ‘폭풍호’ 첫 공개(8/17,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옛 소련제 T-62 전차를 개량해 생산한 ‘폭풍호’ 전차를 처음으로 공개함.
-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17일 “북한이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 폭풍호로 알려진 신형 전차를 공개해 분석 중”이라며 “화면상에 나타난 기동 모습으로 미뤄 일단 기존 ‘천마호’ 전차보다 화력과 기동성, 생존성 등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힘.

##### ② 北 미그21 전투기, 中랴오닝서 추락(8/18, 연합뉴스)

- 북한 국적의 미그-21 전투기가 17일 오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항에서 추락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밝힘.
- 익명을 요구한 한 이 소식통은 “17일 오후 푸순 상공을 날던 북한 군용기 한대가 사고로 추락했다”며 “사고 비행기에는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힘.
- 중국의 군사정보 사이트 ‘시루망(西陸網)’도 “17일 오후 4시쯤 북한 전투기 1대가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항 인근에 추락했다”면서 “추락한 전투기는 ‘미그(MIG)-21’로 보인다”고 전하며, 인터넷상에 현장에서 누리꾼이 찍은 사고현장과 추락한 비행기 사진 2장도 공개
- 사진에 등장하는 이 비행기 꼬리 부분에 북한 국적을 나타내는 푸른색과 붉은색 원 안에 별이 박힌 로고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음.
- 군의 한 소식통은 “중국에서 추락한 북한 군용기는 전날 신의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것이 레이더에 포착됐다”면서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레이더 화면에 미그-21기로 식별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추락 현장의 사진에 나타난 동체의 주날개 모양이 삼각형인 것으로 미뤄 미그-21 전투기로 보인다”고 말함.
- 베이징의 한 군사소식통은 “통상 비행기가 추락하면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나지만 이 전투기의 형체가 온전했던 것으로 미뤄 연료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③ 추락 北전투기, 생존자 없다(8/19, 연합뉴스)

- 지난 17일 오후 중국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항에서 추락한 북한 국적 미그(MIG)-21 전투기는 조종사 한 명만 탑승하는 단좌(單座)식 전투기로, 추락 당시 조종사 한 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또 숨진 조종사가 계급장을 달지 않아 중국 당국이 그의 직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의 정보 소식통들은 19일 “추락한 북한 전투기는 조종사 한 명만 탑승하는 단좌식으로, 두 명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히며,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생존자는 없다”고 추가 탑승 가능성을 일축
-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정보 소식통은 “인터넷에 공개된 추락 전투기 사진만으로는 단좌식인지 복좌(複座)식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중국 당국이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전투기가 단좌식인 것을 확인했다”며 “생존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잘라 말함.

#### ● 北, 中서 전투기 추락 사실 인정(8/19,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19일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에서 추락한 북한 전투기에 대해 완곡하게나마 존재를 인정함.
- 익명을 요구한 북한의 한 당국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과 전투기 잔해 처리나 사고 수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잘 되지 않겠느냐”고 밝혀 사실상 북한 국적 전투기가 중국에서 추락한 사실을 확인
- 그는 “(선양 북한)총영사관에서 어제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해 둘러봤다”고 전하며, 지난 18일 선양의 북한총영사관 관계자가 사고 현장을 방문, 중국측과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함.
- 그는 그러나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을 피했으며, 19일 새벽 반출된 추락 전투기의 행방에 대해서도 역시 “아는 바 없다”고 말함.

#### 라. 사회·문화

##### ● 개점 50주년 맞은 평양냉면 ‘원조’ 옥류관(8/17, 조선중앙통신)

-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대표적 음식점 ‘옥류관’이 개점 50주년을 맞았음.
- 통신은 최근 ‘창립 50돐을 맞은 평양의 자랑 옥류관’이라는 기사에서 “1960년 8월 13일 풍치 수려한 대동강변에 솟아난 조선식 합각지붕의 옥류관은 민족의 향취가 짙은 인민봉사의 대전당으로 명성을 떨쳐왔다”면서 “민족음식들을 제일 잘 만드는 식당으로 이름난 이곳에서는 천하별맛의 명요리들이 평양냉면과 함께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고 소개
- 통신에 따르면 옥류관의 이같은 명성은 그동안 찾은 연인원 6천 880만 명의 누적 고객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통신은 “현재 대동강변에 짓고 있는 부속 ‘요리전문식당’이 완공되면 옥류관의 민족음식과 희귀 요리 메뉴가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함.



● 北, 美 NGO에 “도와달라” vs 유엔기구 도움 ‘외면’/ (8/19,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북한 당국이 유엔 기구들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외면하면서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에는 무슨 물품이든 보내달라며 신속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방송은 유엔아동기금(UNICEF) 아시아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을 인용, “세계보건기구(WHO) 등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은 북한 당국이 요청하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긴급 구호품을 북한 내 여러 곳에 비축해 놔다”면서 “하시라도 구호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북한 당국에 전했는데도 아직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유엔아동기금의 경우 홍수 피해 현장을 조사해 의료시설과 가옥 등의 파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구호품 10만명분을 준비해놓은 것으로 전해짐.
- 이런 북한 당국의 태도와 달리 북한의 ‘조미민간교류협회’라는 단체는 최근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같은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에, 수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물품이면 무엇이든 좋다면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함.

● 北, 페이스북도 선전에 활용(8/2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도 계정을 개설하고 체제선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uriminzokkiri)에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100건 정도가 링크되어 있음.

● 北통신 ‘신의주 홍수피해…5천여명 구조’(8/2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21일 0시부터 9시 사이에 수풍호 주변지역에 내린 300mm 이상의 강한 폭우와 중국 지역에서 무더기 비로 인해 압록강물이 넘쳐나 신의주시 상단리와 하단리, 다지리, 의주군 서호리와 어적리 등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농경지가 100% 침수됐다”고 밝힘.
- 통신은 “19~20일사이 중국 동북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압록강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해 강물은 잠깐 사이에 제방을 넘어 신의주시내에까지 밀려들어 도로운행이 마비되고 많은 대상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미처 손쓸 사이없이 들이닥친 큰물로 기본 피해지역인 신의주시 상단리, 하단리, 다지리, 의주군 서호리와 어적도, 막사도는 완전히 물에 잠겨 단층건물들은 지붕만 보이게 되었다”고 밝힘.
- 통신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물 지붕과 둔덕들에 올라 모든 것을 집어 삼키며 사납게 광란하는 큰물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으며 해당 지역에서 긴급 구출대책이 세워졌지만 피해상황이 엄청난 것으로 하여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북한군을 구조활동에 나서도록 ‘명령’했다고 말함.

- 이어 “지금 이 지역에서는 신의주시를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꾼과 근로자,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동원돼 구조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8/2, 5월1일경기장) 성황리에 진행中(8/16, 중통)
- 北 인민무력부,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 개시 50돌(1960/8/25) 즈음 駐北 무관단을 위해 영화감상회 개최(8/18, 중통·중방)
- 北 건축설계작품전시회, 8/13~18까지 함흥에서 진행(8/18, 중통)
- 黃南 봉천군 신담협동농장, 金父子 형상 모자이크벽화 건립(8/18, 중방)
- 조선노동당출판사, 당창건 65돌 즈음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90’ 출판(8/19, 중방)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北-中, 추락한 北 전투기 처리 협의(8/18, 교도통신)

- 중국 동북부 랴오닝(遼寧)성에서 추락한 북한 전투기 처리 문제를 두고 북한과 중국이 기체 회수 등 대응책을 협의하기 시작
- 통신에 따르면 중국 선양(瀋陽)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 차량이 18일 저녁 랴오닝성 푸순(撫順)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중국 외교부의 차관보급 간부는 선양으로 향했음.
- 최명관 주중 북한 대사도 중국 외무성을 방문해 기체 회수 등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 北, 조너선 통해 “美와 평화협정 우선”강조(8/19, 연합뉴스)

- 북한은 한국계 어린이 환경운동가가 제안한 판문점 어린이 평화숲 조성과 관련,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
- ‘고 그린맨(Go Greenman)’으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 학생 조너선 리(13, 한국명 이승민)는 19일 일주일간의 방북 기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판문점 어린이 평화숲’ 조성을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
- 부모와 함께 방북했던 리군은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후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아리랑축전위원회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편지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



했다고 말함.

- 리군은 이 위원회 등 북한 고위층 관계자들과 만나 편지와 함께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자신의 책 ‘고 그린맨의 모험’도 함께 북측에 전달
- 북한 측은 리군 가족들에게 “아이디어는 찬성하지만 미국이 먼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비무장지대(DMZ) 전체를 평화의 숲으로 바꿀 의향도 있다”고 말함.
- 북한 측은 김 위원장에게 직접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리군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보이지 않은 채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얘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김 위원장과 리군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함.

● 北, 동유럽국에 채무 탕감 요청 잇따라(8/19, 파이낸셜 타임스(FT))

-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이 동구권 국가들에 진 빚을 갚지 못해 탕감과 현물 상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구권 국가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음.
- 신문은 ‘헝가리, 북한의 채무 탕감 요청 공개(Hungary reveals North Korean debt request)’라는 제목의 오스트리아 빈 발 기사에서 헝가리 경제 부처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채무 90% 이상을 탕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
- 신문은 “북한 협상팀이 2008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협상에서 경제난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채무 탕감안을 처음 내놓았다”고 전함.
-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일부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북한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 북한의 헝가리 채무는 2천 960만 루블이며, 대부분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헝가리 정부 관리는 설명하며, “세부적인 탕감 규모 등은 추후 확정해야 할 사안인데 언제 협상이 재개될지는 밝힐 수 없으며 인삼(人蔘)으로 갚는 방안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거론된 바 없다”고 전함.
- 앞서 북한은 체코에도 1천만 달러에 이르는 채무의 95% 이상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나머지 5%는 인삼으로 상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체코 재무차관이 밝힌 바 있음.
- 신문은 “북한은 빈사상태의 국내 경제와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무역제재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함.
- 신문은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국제금융거래와 돈세탁, 마약밀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현재 대외 채무는 1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전 공산주의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임.



- **北, 간 총리 담화엔 ‘강도적 본성’ 담겨(8/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한일병합 100주년을 맞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발표한 담화에 대해 ‘강도적 본성’, ‘용납 못할 죄악’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난함.
  - 통신은 ‘한일합병은 일본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국가테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장’을 실어 “우리나라에 대한 국권 강탈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으려는 강도적 본성이 (담화에) 담겨 있다”면서 “이는 1995년 8월 무라야마 담화나 2005년 고이즈미 담화보다도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
  - 이 고발장은 “지난 시기의 담화들에도 개인적 입장 표명이란 문제가 있었지만 사죄 대상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표명했는데 현 집권자의 담화는 남조선만 대상으로 정했다”면서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죄악”이라고 강변함.
  
- **北 ‘日정부, 모든 피해자에 사죄, 배상해야(8/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한일 병합의 부당함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과거 일본 군국주의 정권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무조건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한에만 ‘사과’한 점을 지적한 뒤 “현 일본 정권이 과거 군국주의 정권과 인연이 없고 그 부활을 꿈꾸지 않는다면 군국주의 정권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조건부와 차별이 없이 사죄하고 과거를 반성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일본은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죄하고 배상할 의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과거 범죄에 대한 시급한 사죄와 배상, 대북 적대정책 철회, 군국주의 부활 중단 등을 촉구함.

#### ■ 기타 (대외 일반)

- 양형섭, 中 청년친선대표단(‘주장규’ 中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 서기)과 담화(8/16, 중통)
- 노두철 내각 부총리, 訪北 라오스정부 상임 부수상과 담화 및 연회 개최(8/16, 중통)
  - 北 박길연·리명산(외무성·무역성 부상) 등 배석
- 駐北 인도네시아 대사, 北 박의춘(외무상)·박근광(黨 부부장)·박길연(외무성 부상)·리명산(무역성 부상)·전영진(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등 초대하 自國 독립 65돌 즈음 연회 개최(8/17, 중통)
- 김영남·박의춘, 인도네시아 독립 65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 발송(8/17, 중통)



- 김영남, 가봉 독립 5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도 축전(8/17, 중통)
- 콩고, 8/11 독립 50돌 즈음 北 협조로 '독립탑' 제막식 진행(8/19, 중통)
- 이명철 콩고 駐在 北 대사, 8/11 駐在國 대통령 면담(8/19, 중방)
- 김영남, 訪北 라오스 정부 상임부수상과 담화(8/19, 중통)
- 박의춘 외무상, 駐北 독일 新任대사 '게르하르트 티데만'과 담화(8/19, 중통)
- 北-쿠바 외교관계 설정 50돌 경축집회, 김용진(교육위원회 위원장)·김형준(외무성 부상)·문재철(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및 駐北 쿠바 대사 등 참석下 대동강외교단회관 진행(8/19, 중통)
- '서세평' 리히텐슈타인 駐在 北 대사, 8/11 同國 왕세자와 담화(8/20, 중통)

#### 나. 6자회담(북핵)

- 北, 中우다웨이 방북 확인…“완전한 견해일치”(8/2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6자회담 재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북·중간 '견해일치'에 도달했다고 전함.
  - 통신은 “우다웨이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와 일행이 16일부터 18일까지 조선을 방문했다”며 “방문 기간 김영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박의춘 외무상을 의례방문했고 관계부처 일꾼들과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통신은 “담화와 회담들에서는 지역정세와 조·중 친선관계, 6자회담 재개와 전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토의했다”며 “쌍방은 토의된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강조
  - 북한이 우 특별대표의 방북기간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와 '견해일치'를 강조함에 따라, 양국간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경색된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앞서 19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북한을 방문, 북측 관계자들과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과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北, 中제안 6자회담 재개방안에 동의(8/21, 마이니치신문)
  - 신문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북 당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공식 회담을 우선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재개방법과 관련, 미국과 북한간 협의와 각국 수석대



표에 의한 비공식 협의를 우선하는 방안에 북한이 동의했다고 말할.

### 3. 대남정세

- 北 “통일세 제안은 불순한 체제대결 선언” 비난(8/17,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 구상에 대해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
  - 조평통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역도(이 대통령 지칭)가 떠벌린 통일세란, 어리석은 망상인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불순하기 짝이 없는 통일세 망발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할.
  - 조평통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해 이틀만에 처음 공식 반응을 보인 것
  - 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경제→민족’ 공동체로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매일 북침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평화공동체’를 부르짖고, 북남 협력사업을 질식시켜 놓고 ‘경제공동체’를 운운하며, 북남 공동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통일을 가로막으면서 ‘민족공동체’를 떠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이어 “그 누구의 핵포기를 북남 관계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수작”이라면서 “괴뢰 패당이 끝까지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위협
- 北 “절대 무사하지 못해”…사흘째 UFG 위협(8/17,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 개인 필명 논설을 실어 “조선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켜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려는 범죄적 흥계의 발로”라면서 “전쟁도발을 계속하면 절대로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노동신문은 또 다른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제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해 우리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는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전쟁 도발자들에게 진짜 우리 식의 전쟁맛을 보여주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주장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개인필명 논평에서 “북침 전쟁을 도발하면 지금까지 다져온 멸적의 의지로 침략자들을 깡그리 소탕하고 조국통일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며 위협에 가세



- **北, 또 UFG 위협…이번엔 “불벼락 안길 것”(8/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나홀째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면서 거친 위협 발언을 쏟아냄.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동해와 서해에서 전쟁 연습을 벌인데 이어 남조선 전역에서 다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
  -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준비돼 있으며 모든 자위 수단과 방법을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긴장 격화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세폭발의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의 대외 성명 단체인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이번 연습은) 북침 작전계획에 따라 최신 전쟁 장비와 병력이 대규모로 동원되고 실탄과 실동이 결합된 핵시험 전쟁”이라면서 “예측할 수 없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 원수들의 아성에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
  
- **北통신 “南 선박 단속”…대승호 나포 확인(8/19,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지난 8일 10시 15분경 우리 동해 경제수역을 침범해 어로작업을 하던 남조선 선박이 정상적인 해상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조선 인민군 해군에 의해 단속돼,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힘.
  - 통신은 이어 “초보적으로 조사한 데 의하면 배에는 남조선 사람 4명, 중국 사람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우리의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는 것이 그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6자재개-대북제재..뒤엎키는 두 기류”(8/22)

- 한반도 정세에 상반된 두 가지의 흐름이 뒤엎기고 있음. 한·미 공조를 축으로 대북 금융제재의 고삐를 가하려는 압박의 흐름과 중국을 중심으로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려는 대화의 흐름이 동시 표면화되고 있음. 이른바 ‘포스트 천안함’의 대북 정세대응 방향을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해법이 충돌하고 있는 국면임. 우선 외교가의 시선을 잡아끄는 흐름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드라이브와 이에 호응하는 듯한 북한의 움직임임.
- 이 같은 기류는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16~18일 방북 이후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우 대표는 중국을 방문한 일본 일부 정치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공식 회담을 우선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1일 보도했음.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북한이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 국면으로 서둘러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여기에는 북·중간에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임. 중국으로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안보질서 논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옴. 북한은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난 속에서 시시각각 조여 오는 국제사회의 제재흐름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화 쪽으로의 국면전환을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큼. 특히 조만간 있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발표에 앞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조기 공론화시켜 제재발표의 ‘선언효과’를 떨어뜨리려는 포석도 깔려있다는 풀이가 나옴.
- 그러나 보다 주목할 대목은 양국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공식 회담’ 형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점임.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올해 초 북·미 양국에게 중재안으로 제시한 ‘3단계 재개안’을 거론하고 있음. 이는 ‘북·미 추가대화→ 6자회담 참가국간 예비회담→ 6자회담 본회담 재개’의 단계적 프로세스를 의미함. 이중 핵심은 ‘예비회담’으로, 6자회담 조건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이견을 해소하는 절묘한 협상장치로 볼 수 있음.
- 북·중이 우 부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비공식 회담은 바로 예비회담을 지칭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임. 양국 간 협의결과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1단



계인 북·미 추가대화 요구를 거둬들였을 가능성이 있음.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천안함 문제의 최종적 해결도 이 같은 예비회담의 틀 내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6자회담 재개 흐름이 현단계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천안함 도발에 따라 북한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높은 상황이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협상국면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운 분위기라는 게 외교소식통의 관측임.

- 여기에 대북 금융제재의 고삐를 조이려는 한·미 양국의 기세가 강함.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드라이브에 관계없이 이르면 금주 중으로 대북 금융제재 ‘블랙리스트’를 담은 대북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6자회담 재개흐름에 ‘썩기’를 박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기조도 좀처럼 물러설 기색이 없음.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비롯한 ‘책임 있는 행동’을 선행적으로 보이고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 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고위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태도에는 진정성이 없고 천안함 사태를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미국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이 행동으로서 진정성을 보이려는 주문’이라고 말했음. ‘진정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조치로는 6자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렸던 2008년 12월 당시와 같은 불능화로 복귀하는 행동 등이 거론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6자회담 재개 문제가 당장 가시화된 흐름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임.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개연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천안함 후속대응은 그것대로 진행해 나가되, 북핵이라는 상위이슈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의 트랙을 되살려내야 한다는 여론이 국내외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특히 중국이 조만간 우 부부장의 순방일정을 활용한 ‘셔틀외교’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음. 오는 11월 열리는 한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정치일정도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화와 압박의 대북 투트랙 기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국면마다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음.

#### ● “北, 中 제안 6자회담 재개방안에 동의”(8/21)

-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북 당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공식 회담을 우선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21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 중인 일본의 가토 고이치(加藤紘





- 一) 전 자민당 간사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 이 신문에 따르면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재개방법과 관련, 미국과 북한 간 협의와 각국 수석대표에 의한 비공식 협의를 우선하는 방안에 북한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 ● “中우다웨이 방북..국면전환 가능성은”(8/20)

- 북한은 20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북을 확인하면서 “쌍방이 6자회담 재개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등에 대해 완전히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중국도 전날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평양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우다웨이의 방북 및 6자회담 문제와 관련, “향후의 대화가 생산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진지한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태도를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천안함’을 직접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6자회담과 관련해 협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됨.
- 그러나 천안함 국면이 당장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바뀌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임.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태가 해결돼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공격사건은 북한과의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게 되느냐”고 말했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7일 “6자회담 재개 등 출구전략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기엔 시기적으로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음. 다만 관련국들의 6자회담 움직임이 좀 더 강해지면 정부가 천안함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 형성될 수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이 내달 상순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구도 등 내부분쟁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 미국과 양자회담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미국도 이에 호응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경우 한국이 비핵화와 천안함 사건을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 을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
- 한 대북 전문가는 “앞으로 동북아정세는 천안함 문제보다 6자회담 쪽으로 점점 무게가 이동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6자회담 재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 美, “北 취해야할 조치 있다..행동 변해야”(8/20)

- 미국은 19일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진전을 위한 올바른 환경 조성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 문제에 대해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는 북측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향후의 대화가 생산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진지한 의도 증명하기 위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다”고 지적했음.
- 그는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피한 채 “북한이 취할 구체적 의무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들에 우려를 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이 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그는 “우리가 그런 변화를 본다면, 이(변화)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진지하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유엔 총회가 다가오면서 “많은 파트너 국가들과 직접 협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 유엔 총회기간을 전후해 향후 6자회담 관련국간의 직·간접 협의가 열릴 것임을 시사했음.
-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6자회담 재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북중 간 견해 일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음.

#### ● “中 우다웨이 訪北..6자회담 재개논의”(8/19)

- 중국 외교부는 19일 홈페이지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북한을 방문, 북측 관계자들과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과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다웨이 대표는 방북기간 박의춘 외무성 외상,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외상, 김성기 부외상 등과 만났음.
- 우다웨이 대표는 방북기간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의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미 접촉을 제의하고 이에 대한 북측의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우다웨이 대표는 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등에 지나치게 격렬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음.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미일과 접촉할 예정이지만 한미일은 북한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6자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임.
-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직후인 지난 달 9일 내놓은 성명에서 천안함 사건을 신속하게 매듭짓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데 이어 4일 만인 13일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요구했음. 중국은 이어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지난 11일 한국 국회의원 방중대표단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에 대해 “많은 곤란



이 있지만 6자회담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지난달 10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 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6자 회담 재개 공세에 호응했음.

#### 나. 미·북 관계

##### ● “北, 美NGO에 “도와달라” vs 유엔기구 도움 ‘외면’”(8/20)

-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북한 당국이 유엔 기구들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외면하면서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에는 무슨 물품이든 보내달라며 신속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낳고 있음.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유엔아동기금(UNICEF) 아시아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을 인용, “세계보건기구(WHO) 등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은 북한 당국이 요청하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긴급 구호품을 북한 내 여러 곳에 비축해 놨다”면서 “하시라도 구호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북한 당국에 전했는데도 아직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유엔아동기금의 경우 홍수 피해 현장을 조사해 의료시설과 가옥 등의 파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구호품 10만 명 분을 준비해놓은 것으로 전해졌음.

##### ● <힐 대사 “北, 미래 흐리다”>(8/19)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는 18일 북한의 미래가 매우 흐리다고 평가했음.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는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 북한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솔직히 그들(북한)은 매우 흐린 미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가 (북핵) 협상 과정에 개입할 당시 우리가 노력한 일은 한·미간의 일을 공개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이견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는 명백히 우리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언급,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노무현 정부와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음.
- 그는 또 당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끈 북핵 6자회담 결과와 관련, “최소한 서류 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로 가도록 하는 것을 이뤄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시킨 것이며, 지난 3년간 그들은 원자로를 가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들은 일부 핵물질을 갖고 있지만 최소한 매일 추가적인 핵물질을 생산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 ● 美, “대북제재 곧 발표”(8/17)

- 미국 국무부는 16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리스트가 조만간 발표될 것임을 확인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대북제재와 관련한 진전 사항은 없느냐는 질문에 “없지만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어 대북제재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즈 문제와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그것(발표 지연)은 미국의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음. 이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제재 리스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휴가철이 겹치면서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달 내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음.

### ● “美 국무부팀 방북..北, 곱즈 석방요구 거부”(8/17)

- 미국 국무부는 16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사 담당 관리와 의료진이 지난주 평양을 방문했다고 확인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곱즈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영사 담당 관계자 및 2명의 의사와 통역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국무부 방북팀이 워싱턴을 출발, 베이징을 거쳐 지난 9~11일 방북했다고 밝혔음. 그는 “이번 방문의 이유는 순전히 곱즈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계속되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곱즈에 대한 방문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북한 측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언급, 미국의 요청에 의해 방북이 이뤄졌음을 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방북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임. 이와 관련,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방북팀이 북한에 대한 다른 메시지를 갖고 가지는 않았다”고 말해 순전히 곱즈 건강상태 확인 차원에서 이번 방북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우리는 곱즈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북한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서 국무부 방북팀이 평양 방문 중 북측에 곱즈 석방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음을 시사했음. 그는 “우리는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화를 가져 왔었고, 인도적 관점에서 곱즈를 석방해주도록 유도해 왔다”면서 “북한과 필요한 직접 대화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국무부 방북팀이 평양의 병원에서 곱즈를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초 곱즈가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 옮겨져 구급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었음. 크롤리 차관보는 곱즈 석방을 위한 고위급 관계자의 방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곱즈 석방을 위해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할 것이며, 인도적 차원에서 그의 석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북한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그는 또 북한문제를 전담하는 특사가 북한과 필요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 성 김 6자



회담 특사 등이 뉴욕채널 등을 통해 북측과 곱즈 문제를 두고 접촉하고 있음을 시사했음.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번 방북에 앞서 미국과 한국간에 사전 조율이 있었다”면서 “미국은 순순히 영사적 차원에서 이번에 영사담당자 및 의료진을 북한에 보냈으며, 이에 따라 국무부 한국과 직원이 방북팀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음. 이 소식통은 “미국은 이번에 곱즈의 석방에 무게를 두게 아니라 건강 상태 확인이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 ● “中, 美보다 더 ‘북한 취약하다’ 판단 가능성”(8/15)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북한 체제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음. 미 국방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해병대 기념클럽에서 행한 강연에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 내 불안정이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수많은 북한 난민들을 국경을 건너게 해 (중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이것이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 많은 압력을 가하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어쩌면 그들(중국)은 북한이 매우 취약하다고 우리보다 더 믿고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음. 이날 강연에서 게이츠 장관은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최근 도발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유일한 도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음.
- 그는 또 북한의 헤즈볼라, 하마스 등에 대한 무기 밀매를 계속하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에는 이것이 매우 힘든 국가안보 문제”라고 밝혔음.

#### 다. 중·북 관계

##### ● “압록강 범람에도 北-中 통행‘정상’”(8/22)

-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내린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이 큰 피해를 봤으나 북한과 중국간 차량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2일 보도했음. 신문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압록강 유역에 최고 651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압록강이 범람, 북한과 중국의 저지대 곳곳이 침수되는 등 물난리를 겪었지만 단둥과 신의주간 화물차량과 열차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 지난 21일 오전 압록강이 범람, 단둥의 강변 공원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관덴(寬甸)만족자치현에서 4명이 실종되고 가옥 230여 채가 무너졌으며 5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음. 이번 압록강 범람에 따



른 피해는 1995년 발생한 압록강 홍수 피해 이후 15년 만의 가장 큰 규모임. 북한도 이번 홍수로 큰 피해를 봤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이번 홍수로 신의주 일대 농경지 대부분이 침수되고 위화도를 비롯한 북한의 압록강 섬들이 대부분 물에 잠겼으며 신의주의 일부 저지대 살림집이 침수돼 5천여 명이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했다고 보도했음

### ● 北, 中우다웨이 방북 확인..“완전한 견해일치”(8/20)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6자회담 재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북중간 ‘견해일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 중앙통신은 “우다웨이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 특별대표와 일행이 16일부터 18일까지 조선을 방문했다”며 “방문 기간 김영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박의춘 외무상을 의례 방문했고 관계부문 일꾼들과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이 통신은 “담화와 회담들에서는 지역정세와 조(북)·중 친선관계, 6자회담 재개와 전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깊이있게 토의했다”며 “쌍방은 토의된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강조했다.
- 북한이 우 특별대표의 방북기간 한반도 현안에 대한 논의와 ‘견해일치’를 강조함에 따라, 양국간에 친안함 사건으로 인해 경색된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앞서 19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북한을 방문, 북측 관계자들과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과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 “中, 추락 전투기 선양 공군부대 이송”(8/20)

- 중국 당국이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향에서 추락한 북한 미그(MIG) 21 전투기 잔해를 선양(瀋陽)의 공군부대로 이송,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20일 “중국 당국이 사고 현장에서 반출한 추락 전투기를 선양 공군부대로 이송,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9일 새벽 무장 경찰 100여 명을 동원, 사고 현장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채 추락 전투기를 해체, 3대의 대형 트럭에 나눠 실어 반출했음. 이 소식통은 또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사망 조종사의 시신은 이미 화장, 선양 부근의 납골당에 임시 안치돼 있다”고 소개했음. 그는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데다 보상 등 사고 수습과 관련, 북한과 완전한 합의가 이뤄



지지 않아 조종사 유골과 전투기 잔해를 아직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유골과 전투기 잔해를 언제 북한으로 보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외신 보도에 이어 추락 전투기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북한 전투기 추락 사고가 알려지자 북한과 중국은 전투기 추락 하루 뒤인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수습책을 논의하는 등 사건 조기 수습을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 “北전투기, 中관제탑과 교신 없었다”(8/20)

- 지난 17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항에서 추락한 북한의 미그 21 전투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한 뒤 지상 관제탑과 교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20일 “전투기 추락 이후 중국 당국이 조사한 결과 이 전투기가 중국에 들어온 뒤 지상 관제탑과 교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그는 또 “항로 이탈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료 부족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관제탑과 교신이 이뤄지지 않았던 데 대해 한 군사 전문가는 “교신 장치 고장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탈북이 목적이었다면 중국 당국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신을 거부한 채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불시착 지점으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9일 중국 당국자를 인용, 이 전투기가 기계 결함으로 항로를 이탈해 중국 영내에 들어왔다가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 “北中, 추락전투기 어떻게 처리하나”(8/19)

- 북한과 중국이 랴오닝(遼寧)성에서 추락한 북한 전투기 사후처리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관영 신화통신과 반관영 중국신문사는 18일 오후 중국 당국을 인용, “중국이 북측과 전투기 추락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보다 구체적으로 선양(瀋陽)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 차량이 18일 저녁 랴오닝성 푸순(撫順)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중국 외교부의 차관보급 간부도 선양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최병관 주중 북한 대사도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기체 회수 등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 베이징의 군사소식통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의 군 관계자가 가장 먼저 블랙박스를 회수해 조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면서 북한 국적기임을 확인한 뒤 북한 당국에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전투기의 경우 일반 여객기의 블랙박스과 달리 음성녹음 장치 등을 제외하고는 주요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커 조종사가 사망한 이상 사고 경위와 탈북 시도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 또 다른 소식통은 항공기 잔해 수습과 추락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는 쉽게 해결되겠지만 사고원인과 탈북 시도 여부 확인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건은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 모두 곤혹스러운 사건인데다 사안의 민감성을 놓고 볼 때 철저한 함구령이 내려져 은밀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북한 전투기 추락사건과 관련, 북한기의 진입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항공망이 뚫렸다’는 비판에 직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역시 조종사의 탈북 시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체제 불안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철저히 함구할 가능성이 큼. 이번 사안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네티즌들이 현장 사진 2장을 곧바로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실 관계가 비교적 쉽게 확인되긴 했지만 이 사진 역시 현재는 인터넷상에서 삭제되는 등 중국 당국은 이미 통제조치에 들어갔음. 베이징의 정보소식통은 “조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북한과 중국이 철저히 함구해 사건의 경위 자체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북한 전투기가 17일 오후 랴오닝성 푸순에 추락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북한 전투기가 중국으로 향한 이유를 두고는 각국 언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한국 언론들은 주로 탈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탈북을 하려고 했다면 중국 상공을 통과할 게 아니라 남쪽으로 향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라며 “16일 시작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지훈련)에 대응하는 훈련이나 경계비행을 하다가 사고로 중국으로 향한 것 아니냐”며 탈북설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北-中, 전투기 추락에 이례적 신속 대응”(8/19)
- 지난 17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향에서 추락한 북한 전투기 사고 수습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정보 유통으로 북한과 중국이 사고를 감출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중국 인터넷에는 전투기가 추락한 지 하루 뒤인 지난 18일 오전 8시께 누리꾼이 찍은 전투기 사진 2장이 유포됐음. 이 가운데 1장은 특히 북한 국적을 나타내는 마크가 선명한 꼬리 부분에 초점을 맞췄음. 북한 전투기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음. 외신들이 일제히 북한 국적 전투기 추락 사실을 보도한 데다 인터넷에 확실한 ‘물증’까지 나돌면서 중국 당국도 북한 전투기 추락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음.
  - 전투기가 추락한 지난 17일 오후만 하더라도 “국적 불명의 소형 전





투기가 추락했다”고만 언급했던 중국 관영 매체들이 18일 오후부터 중국 당국을 인용,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북한 비행기로 추정된다”고 이 전투기의 국적을 사실상 확인한 것임.

- 북한 당국자가 19일 연합뉴스에 “중국과 사고 수습을 협의하고 있으며 잘 될 것”이라고 자국 전투기의 추락 사실을 인정한 것은 중국 당국마저 이 사건을 공개한 상황에서 전면 부인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억측만 양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런 배경과 관련,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노출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우선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에는 촬영 시점이 ‘17일 오후 3시46분’으로 표기돼 있음. 전투기 추락 시점이 이날 오후 3~4시 사이로 추정되는 점으로 미뤄 이 사진은 사고 발생 직후 찍은 것으로 보임. 라구향 현지 주민들은 전투기가 추락한 지 15분여 만에 무장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 이 사진을 찍은 누리꾼은 통제된 사고 현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중국 당국의 인사일 가능성이 있음. 라구향이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사고 현장을 찍어 하루 뒤에 공개할 만큼 인터넷에 밝은 젊은층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런 추론을 가능케 함.
- 당국의 통제를 받는 중국 관영 매체들이 비록 ‘국적 불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사고 직후 신속하게 전투기 추락 사실을 보도한 것도 이례적임. 통상 중국 언론매체가 북한이 연루된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 ‘외국’등으로 얼버무리는 관행을 아는 외신 기자라면 국적불명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북한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 최근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북한과 중국 간의 마찰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지난 6월 4일 북한 경비대가 동(銅) 밀수를 위해 압록강을 넘어 북한으로 접근하던 중국 배에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음. 북한 당국이 즉각 사과와 함께 배상에 나서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음.
- 그러나 같은 달 20일 북한 자강도 만포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국 무역업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열흘 뒤에는 북·중 국경서 양측 경비대원들이 총격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나 중국 지도부로서는 별일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북·중간 변경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었을 일이고 특히 중국의 지방 관료들 입장에서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일을 이용해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가능함. 그렇다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북·중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작아 보임. 변방의 마찰들이 중앙에서 개입하면 쉽게 해소되기 때문임.
- 북한 전투기가 유례없이 중국 영내에서 추락한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 군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탈북을 하려 했던 항법장치 고장이나 조종사의 조종 미숙이었던 군에서 발



생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발생한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임. 개혁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된 데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일각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북한 군인들이 탈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 ● “北, 中서 전투기 추락 사실 인정”(8/19)

- 북한 당국이 19일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현 라구(拉古)에서 추락한 북한 전투기에 대해 완곡하게나마 존재를 인정했음. 익명을 요구한 북한의 한 당국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과 전투기 잔해 처리나 사고 수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잘 되지 않겠느냐”고 밝혀 사실상 북한 국적 전투기가 중국에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음.
- 북한 관련 사고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에두른 표현을 사용했지만 즉각적으로 사실을 확인한 것은 극히 이례적임. 이미 중국의 인터넷을 통해 북한 국적 마크가 있는 추락 전투기의 사진이 공개됐고 중국 관영 매체들도 중국 당국을 인용, 추락 전투기가 북한 국적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만큼 더는 감출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이 관계자는 또 하루 전인 지난 18일 선양의 북한총영사관 관계자가 사고 현장을 방문, 중국 측과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음. 그는 “(선양 북한)총영사관에서 어제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해 둘러봤다”고 전했음. 그는 그러나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을 피했음. 19일 새벽 반출된 추락 전투기의 행방에 대해서도 역시 “아는 바 없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중국과 북한은 지난 18일부터 사고 수습과 전투기 잔해의 처리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오후 중국 당국을 인용, “중국 당국이 북측과 전투기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교도 통신도 이날 최병관 주중 북한대사가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기체 회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음. 또 중국 외교부의 차관보급 간부가 이날 선양에 도착하고 주선양 북한총영사관 관계자와 중국의 선양군구 사령관도 이날 오후 늦게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선양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사고 현장에서 반출한 추락 전투기를 즉각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하겠지만 당분간 사고 전투기를 상대로 중국으로 넘어온 경위나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임.
- 한편 지난 17일 오후 이 전투기가 추락한 지 15분 만에 중국의 무장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 시신을 수습했으며 조종사는 30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당시 비행기 꼬리에 장착된 낙하산이 펼쳐진 덕에 비행기 잔해가 비교적 온전한 형체를 갖추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 “北, 中회사 통해 미사일장치·WMD물자 밀반입”(8/19)

- 북한이 지난 4월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첨단 계측기계를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북한이 지난 4월 중국회사로부터 서류상으로는 일반기계로 위조해 첨단 계측기계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계측기계는 미사일 발사에 활용되는 전자장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등에서 대북 수출을 금지한 물자임.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 미국산 계측기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물자의 대북 수출을 밀착 감시해 왔음. 이번에 반입된 계측기계 역시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음.
- 북한은 또한 지난 6월에 일본 무역업자로부터 미사일 발사대로 전용할 수 있는 중고 굴착기를 수입하려다 일본 경찰에 적발돼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몽골과 러시아 등을 통해 대량 파괴무기(WMD) 관련 물자와 사치품을 우회적으로 반입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음. 정부 당국은 북한 고위층이 중국으로부터 다량의 벤츠 승용차를 수입한 것을 파악하고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행낭을 이용해 양주, 시가, 마약 등의 사치품을 운반한 사례도 대거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中과 교역 늘어..의존도 심화”(8/16)

- 올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12억9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6.8% 증가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16일 중국 세관 통계를 인용, 상반기 북중간 교역이 작년 동기대비 16.8% 증가한 가운데 북한의 중국 수출은 3억 5천만 달러로 1.1% 감소한 반면 북한의 중국 수입액은 9억4천만 달러로 25.2%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상반기에만 5억9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4억달러)에 비해 48.5%나 급증했음.
-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물자는 식량 14만t, 원유 30만t, 비료 10만t 등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밀가루가 작년 동기 대비 383% 급증했고 전화 및 전신기기가 381% 늘어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이처럼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한 원인은 북한의 식량난과 함께 주요물자의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대중 무역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전반적인 원인으로서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한간 교역이 중단되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과도 교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북한이 필요한 물자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라. 일·북 관계

### ● 北, “日정부, 모든 피해자에 사죄, 배상해야”(8/20)

- 북한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한일 병합의 부당함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과거 일본 군국주의 정권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무조건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했음.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한에만 ‘사과’한 점을 지적한 뒤 “현 일본 정권이 과거 군국주의 정권과 인연이 없고 그 부활을 꿈꾸지 않는다면 군국주의 정권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조건부와 차별이 없이 사죄하고 과거를 반성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음. 담화는 이어 “일본은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죄하고 배상할 의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과거 범죄에 대한 시급한 사죄와 배상, 대북 적대정책 철회, 군국주의 부활 중단 등을 촉구했음.
- 중앙통신도 이날 ‘한일합병은 일본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국가테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장’을 실어 “우리나라에 대한 국권 강탈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으려는 강도적 본성이 (간 총리의 담화에) 담겨 있다”면서 “이는 1995년 8월 무라야마 담화나 2005년 고이즈미 담화보다도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 고발장은 이어 “지난 시기의 담화들에도 개인적 입장 표명이란 문제가 있었지만 사죄 대상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표명했는데 현 집권자의 담화는 남조선만 대상으로 정했다”면서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죄악”이라고 강변했음. 고발장은 또 “과거 청산은 일본의 역사적 책임이며 회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법적 의무”라면서 “조일(북일) 현안 해결의 최우선적 과제도 일본의 과거청산이며 여기에 조일 관계 개선의 전망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 ● 北 “간 총리 담화엔 ‘강도적 본성’ 담겨”(8/20)

- 북한이 한일병합 100주년을 맞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난 11일 발표한 담화에 대해 ‘강도적 본성’, ‘용납못할 죄악’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한일합병은 일본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국가테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장’을 실어 “우리나라에 대한 국권 강탈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으려는 강도적 본성이 (담화에) 담겨 있다”면서 “이는 1995년 8월 무라야마 담화나 2005년 고이즈미 담화보다도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 고발장은 “지난 시기의 담화들에도 개인적 입장 표명이란 문제가 있었지만 사죄 대상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표명했는데 현 집권자의 담화는 남조선만 대상으로 정했다”면서 “이러한 처사는 명



백히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죄악”이라고 강변했음. 고발장은 또 “과거 청산은 일본의 역사적 책임이며 회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법적 의무”라면서 “조일(북일) 현안 해결의 최우선적 과제도 일본의 과거청산이며 여기에 조일 관계개선의 전망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 고발장은 이어 일본 당국의 ‘대동아공영권’ 야망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이 제2의 ‘한일합병’을 강요하려 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이라는 섬나라를 전면 타격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과를 총결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마. 기 타

##### ● “北, 동유럽국에 채무 탕감 요청 잇따라”(8/19)

-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이 동구권 국가들에 진 빚을 갚지 못해 탕감과 현물 상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구권 국가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음.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9일 ‘헝가리, 북한의 채무 탕감 요청 공개(Hungary reveals North Korean debt request)’라는 제목의 오스트리아 빈 발 기사에서 헝가리 경제 부처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채무 90% 이상을 탕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북한 협상팀이 2008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협상에서 경제난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채무 탕감을 처음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일부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북한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북한의 헝가리 채무는 2천960만 루블이며, 대부분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헝가리 정부 관리는 설명했다. 이 관리는 “세부적인 탕감 규모 등은 추후 확정해야 할 사안인데 언제 협상이 재개될지는 밝힐 수 없으며 인삼(人蔘)으로 갚는 방안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거론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체코에도 1천만 달러에 이르는 채무의 95% 이상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나머지 5%는 인삼으로 상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체코 재무차관이 밝힌 바 있음.
- FT는 “북한은 빈사상태의 국내 경제와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무역제재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음. 이 신문은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와 돈세탁, 마약밀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현재 대외 채무는 1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3분의2는 전 공산주의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 ● “이란 대통령, 대북한 협력관계 무한지속”(8/19)

- ‘고 그린맨’(Go Greenman)으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 학생 조너선 리(13, 한국명 이승민)는 19일 북한 방문기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판문점 어린이 평화숲’ 조성을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모와 함께 방북했던 리군은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면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음. 리군은 방북기간 매우 안전하게 머물면서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해 여러 곳을 방문했다고 말하고 방북이 인상깊었다고 덧붙였음.
- 리군은 이어 방북전 다소 긴장했으나 DMZ를 직접 둘러보고 큰 슬픔을 느꼈다고 말하고 남북이 빨리 통일되기를 바란다고 방북 소감을 밝혔음. 그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과일나무와 밤나무가 심어져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판문점 어린이 평화숲’ 조성을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2일 부모와 함께 북한으로 떠난후 1주일만에 베이징으로 돌아왔음.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판문점에 어린이 평화숲을 조성해 달라’는 편지를 보낸 바 있는 리군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길 희망하고 있음.
- 리군은 이날 한국으로 건너가 20일부터 한국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 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유프로 세계총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게 판문점 어린이 평화숲 조성의 필요성을 연설할 예정이다.

### ● “이란 대통령, 대북한 협력관계 무한지속”(8/18)

-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지난 17일 조인철 이란 주재 신임 북한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란과 북한 간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며 양국 협력 관계 증진에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18일 대통령실 웹사이트를 인용, 보도했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최근 경색 국면을 보이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남북 당국이 적들(서방)의 음모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음. 그는 미국 정치인들이 도발적인 행동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남북한 당국이 남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강대국들이 국가 간 긴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며 현재 거만한 권력에 맞선 저항은 미래 세계에 평화와 안정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북한과 이란은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에서 “이란은 북한과 미사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완성할



경우 해당 기술이나 시스템이 이란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그러나 핵 또는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북한과 어떤 협력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음.

### ● 폴란드, “北 유엔제재 위반 포착시 즉각 조사”(8/17)

- 북한의 해외계좌가 개설돼 있는 유럽 국가 중 하나로 알려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 내에서 유엔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불법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 폴란드 외무부의 피오토르 파스코브스키 대변인은 RFA에 “북한의 불법 외화 송금 의혹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폴란드 내에서 북한의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이어서 관계 당국이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온전히 지지하고 규정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폴란드 내에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이나 기관의 어떤 혐의라도 포착되면 당국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RFA에 따르면 폴란드의 ‘Kredyt’은행은 지난해 발표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의 ‘유엔 제재 1874호 관련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연합개발은행’이 직접 거래하는 21개 외국 은행 중 하나로 지목됐음. 또 최근 나온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폴란드는 북한의 해외 계좌가 있는 8개 유럽국가에 포함됐음.
- 한편 ‘Kredyt’은행이 속한 폴란드 KBC그룹의 이사벨라 트오질로 대변인은 RFA에 “우리 은행은 1990년 창립 이후 북한과 어떠한 경제 교류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국제적 기준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유엔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美 “제재대상과 거래시 美금융시스템 접근차단”(8/21)

- 미국은 20일 이란제재 문제를 두고 그동안 한국 등 8개국과 협의를 벌였다면서 제재대상에 오른 이란 기업이나 기관과 거래를 계속할 경우 제3국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 바레인, 브라질, 에콰도르, 일본, 레바논,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이란 문제에 관한 3주간에 걸친 글로벌 대면 협의가 끝났



다”고 발표했다.

- 재무부는 스투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및 데이비드 코헌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 차관보 등이 지난 3주간 이들 국가와의 협의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특히 “이번 여행을 통해 재무부 당국자들은 포괄적 이란제 재법의 금융조항을 (각국의) 규제당국 및 금융분야 인사들에게 브리핑 했으며, 미국에 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과 거래를 계속하는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또 “재무부의 제재담당자들은 (8개국) 고위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의 철저하고 포괄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성명은 우리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이란과 각각 이란 제재 수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것임.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의 제재가 이미 이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란 행동의 변화를 설득하기 위한 일치된 행동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무부팀이 강조했다.
- 그러나 한국 등 각국과 별인 구체적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레비 차관은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경제 고립이 가중되면서 이란이 불법적 목적을 위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하려고 새로운 채널 추구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들은 이런 위협을 막을 적절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감시 강화를 촉구했음. 이와 관련, 재무부는 이란이 불법적 거래를 하거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강화된 감시를 위해 각국과 대화를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 ● 정부 “빠른 시일내 미·이란과 협의 시작”(8/21)

-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 시행명령 제정에 따라 향후 우리측 대응 방향에 대해 미국, 이란과 각각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란제재법 시행 명령을 분석하고 국제사회 이란제재 동향 점검한 뒤 미국, 이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이 폭넓게 논의됐고 미국의 이란 제재 시행명령이 만들어진 만큼 미국과 이란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빠른 시일내 미국, 이란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이란과 협의에 참여할 대표단을 각각 구성해 늦어도 내주 중에는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 그는 향후 협의에서 우리가 취할 조치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협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외교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 이란과 협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음. 우리측의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떤 식의 조치가 될지는 결정된 게 없다”며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대책에 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고 외교적인 과정을 거쳐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음. 이란 중앙은행 부총재의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방문과 관련,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양자 간 문제라 밝히기 어렵다”며 이란 측이 영업 정지에 대해 용인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음.

- 정부는 또 이날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과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움 직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있어 관계부처 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음.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자금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 어떻게 도움을 줄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그는 “외국금융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외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국내은행들이 미국 시행령을 기초로 어느 정도 무역금융을 취급할지 자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에 문제제기도 하고 우리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관계자는 최근 이란 관련 보도와 관련,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제재 여부,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가 이어지는데 이는 앞으로 있을 대미, 대이란 협상에 결정적인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보도자체 협조를 요청했음.

### ● “한미FTA, 재협상 못해..쇠고기 검역은 주권문제”(8/20)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해 “이익도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맞추는 것이며, 재협상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FTA는) 부분별 이익을 전체적으로 맞춘 것”이라며 “한 섹터를 건드리면 다른 섹터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라며 “검역은 주권 문제이므로 FTA 조건이 아니다”고 지적했음.
- 이 당국자는 이란 제재 문제에 언급, “우리가 북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제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유엔에서 이란(문제)이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은 논리”라며 “확산방지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제재 여부와 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 재무부가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DA)’ 연방관보에



계재한 것과 관련, “상당히 법률적이고 세부적이어서 그냥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렵다”며 “로펌과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미국에도 자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리스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8월 말쯤이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음.

#### ● “한·미, 9월초 대잠훈련 소규모로 진행”(8/19)

- 한국과 미국은 9월초 서해상에서 실시하는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애초 계획보다 축소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한·미가 서해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소규모로 진행하자는데 공감한 것으로 안다”면서 “훈련 방법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면 소규모 전력도 참가하더라도 훈련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양국 군 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지난달 25~28일 동해상에 이뤄진 ‘불굴의 의지’ 훈련 때보다 참가 전력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양국 군 당국이 훈련 방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 미국은 이번 연합훈련에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를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지스구축함 1~2척을 참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서해 연합 대잠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중국과 북한 등의 반발을 감안하고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도 이번 훈련을 놓고 ‘불굴의 의지’ 훈련 때와 다르게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고 있음.

#### ● 美, “한미 대잠훈련, 분명한 대북 메시지”(8/19)

- 미국 국방부는 9월 초 서해에서 실시될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은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18일 밝혔다. 브라이언 휘트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대잠훈련 실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공약과 관련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의 (대한 방위) 공약은 분명하다”면서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군의 준비태세와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훈련과 관련한 중국 측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 서해 공해지역에서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면서 “이번 훈련이나 계획돼 있는 다른 훈련들을 중국이 자신들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훈련들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향후 공격을 억지하고,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결의를 역내에 확인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며, 북한에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훈련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앞서 마크 벨러스터리스 국방부 아.태담당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다음 훈련은 대잠수함전에 대한 전술, 기법, 절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한반도 서해에서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훈련은 아직 계획 수립 과정에 있다”면서 “훈련의 규모나 훈련에 참가할 구체적 함정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 “한·미, 내달초 서해서 연합대잠훈련 실시”(8/18)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군사조치 일환으로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9월 초 서해상에서 실시한다고 18일 공동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지난달에 있었던 양국 외교·국방 장관회담에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한반도 동·서해상에서 일련의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9월 초 서해상에서 방어적 성격의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28일 동해상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양국 동맹간의 대잠수함전에 대한 전술과 작전능력 향상, 각종 대응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양국은 설명했다.
- 양국은 현재 구체적인 훈련 계획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참가 전력과 훈련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이번 훈련에 미측은 7함대 소속의 이지스 구축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파견할 것으로 관측됨. 니미츠급 항모인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는 대잠수함훈련이란 성격상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임.
- 미 7함대는 8천~9천t급 순양함(카우펜스, 샤일로 등)과 알레이버크급(7천~8천t급)의 이지스 구축함(존 메케인 등), 상륙지원함(4천~1만5천t급), 버지니아급(7천~1만t급)의 핵잠수함(휴스턴, 버팔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 군은 한국형 구축함(4천500t급.KDX-II)과 1천800t급 및 1천200t급 잠수함, 링스 대잠헬기, 해상초계기(P3-C), F-15K 전투기 등 핵심 전력을 참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연합 대잠수함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한·미 양국간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메시지를 대·내외에 나타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 한·중 관계

#### ● “정부, 금주 중 ‘우다웨이 방북’결과 청취”(8/22)

- 정부는 금주 중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방북결과를 청취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중 양국이 우 부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 재개방안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지 주목됨.
- 특히 중국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비핵화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비



공식 6자회담(또는 수석대표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관련국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개략적인 방북결과는 중국측으로부터 통보받았지만 보다 상세한 북·중 협의결과는 금주 중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것’이라며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주요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부부장이 조만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우 부부장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 아직 중국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 이에 앞서 우 부부장은 지난 16~18일 평양을 방문, 김영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박의춘 외무상 등 북한 고위인사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 <韓中수교 18년> ①천안함 이후 ‘경고음’(8/18)

- 한국과 중국 관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 특히 중국에서 한국을 겨냥한 날선 공격이 예사롭지 않음. 지난달 하순 동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 군부 인사들의 거친 언사에서도 중국의 노여움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음.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중국 정부의 국제적인 시각을 대변한다고 할 만한 환구시보는 아예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음. 이 신문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국은 중국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강요한다” “한국이 방종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함. “미국만을 향한 외교를 한다”며 두고보자 식의 으름장도 서슴지 않음.
- 관영언론의 이런 부추김에 중국내 포털사이트의 댓글은 연일 한국 성토로 이어짐. 그동안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비난전이 오갈 경우 한중관계에 득될 게 없다는 점을 들어 나름 ‘통제’를 가해왔지만 최근 중국 네티즌의 한국 때리기는 통제되지 않음.
- 지난 1992년 수교한 양국이 지난 2000년의 마늘분쟁, 그리고 2004년의 동북공정 등의 역사왜곡 문제로 마찰을 겪었지만 근래의 한중관계만큼 경색되지는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임. 한중 양국이 수교 후 선린우호관계(1997년)→협력동반자관계(2002년)→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2007년)를 거쳐 현재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해왔지만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냉랭해졌으며 최대 난기류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옴.
- 통상 중국 여론이 정부의 시각을 동반한 관영 신문과 TV 등의 매체가 특정 대상을 공격하면 자연스레 여타 인터넷 매체들이 이에 가세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 관영언론의 ‘여론형성’ 과정을 거쳐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한국 응징론’이 꿈틀거리는 점은 예사롭게 넘길수 없다는 말이 나옴.
- 바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임. 자칫 한국 상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그 타격은 치유가 어려울 것으로 보



기 때문임.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최근 중국의 여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미 한중 양국간 교역량은 한-미와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점에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더욱이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4조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내수 확대에 나선 중국 시장은 한국 기업이 놓칠 수 없는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아왔음.

- 때문에 한중관계가 왜 난기류에 빠졌는지 원인을 찾아내고, 극복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적지 않음. 한중관계 경색의 원인은 가깝게는 천안함 사건에서, 멀게는 한국의 지속적인 한미동맹 강화에서 찾는 시각이 일반적임.
- 우선 중국으로선 한미동맹 강화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음.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안정적인 대미관계를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에 동북아 영향력 강화를 노리고 대양으로 진출하려는 모순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임.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그런 탓에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08년 5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기간에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이라며 다소 공격적인 표현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음.
- 사실 천안함 사건은 상당기간 내재돼 왔던 한중관계의 난맥상을 드러나게 한 돌발적인 사건이라는 지적임. 중국은 사건 발생초기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잠수함을 동원해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 지난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음.
-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천안함 사건이 회부되고서는 북한 편 들기를 본격화했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 미국과의 공조로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이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점이 명시되고 그 공격행위가 규탄됐지만, 중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공격 주체로 북한이 명시되지는 못했음. 이런 갈등 끝에 한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비등했고 중국 역시 한국측이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몰아세우기만 한다며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음. 문제는 이런 불협화음이 현실화되는 점임.
- 중국은 한미 양국이 지난달 21일 외교·국방(2+2) 회담을 계기로 같은 달 25~28일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자 그 기간을 즈음해 한달간 서해부근 내륙, 산둥(山東), 남중국해 등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음. ‘강(強) 대 강(強)’으로 응수한 셈임. 그러면서 중국은 관영언론을 동원해 한국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음.
- 더 우려스런 대목은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경제적 지위 약화와 중국의 부상, 그런 가운데 미국-베트남 핵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남중국해와 동북아에서 미중간 대립이 격화하는 속에서 한중



관계가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조지 부시 미 행정부 시절에 미국과 중국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달성이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협력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인식은 ‘실종’된 듯한 인상임. 중국은 애초 천안함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북핵 6자회담 재개 국면을 조성해간다는 복안을 가졌던 듯 함.
- 중국은 그러나 미국이 최근 천안함 사태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연계시키면서 대북 추가제재 방침을 밝히고 서해에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보내 훈련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수를 이어가자 일단 6자회담 재개 시도는 ‘보류’한 것을 보임.
- 안보리의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후 북한과 중국 간에 오갔던 6자회담 재개의 목소리는 이미 잦아들었으며 과거 북핵 6자회담 활성화를 위해 한중이 빈번하게 마주했던 테이블에는 어느덧 먼지만 쌓였음. 이런 한중관계의 난기류가 향후 양국의 미래에 어떤 암운을 드리울 것인지에 근심만 쌓여간다는 지적임.

#### 다. 한·일 관계

##### ● 日관방부장관 “韓 개인청구권 인정 없다”(8/22)

- 일본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관방부장관은 22일 한국에 대해 전후 보상과 관련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야마 관방부장관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일 강제병합100년 담화를 계기로 한국에 개인청구권을 인정할 계획은 일절 없다고 못박았음.
- 그는 한국을 강제 병탄한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과 관련, 체결 당시 국제법상 유효했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또 간 총리의 담화 발표 하루전인 지난 9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 등에게 담화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고 말했음.
- 담화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 논의가 충분치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책조사회에도 담화발표 전날 설명했다”면서 “담화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배려했다”고 밝혔음. 후쿠야마 관방부장관은 간 총리,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 등과 함께 한일 강제병합100년 담화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음.

##### ● 日언론, “한국 반일(反日) 감정 진정”(8/22)

- 일본의 일부 언론은 22일로 한일 강제병합 체결 100년을 맞았으나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은 과거처럼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음. 도쿄신문은 이 날짜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언론은 연초부터 병합 100년을 기념하는 특집기사와 프로그램을 내보냈으나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데다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여는 등 자신감이 커지면서 과거와 같은 반일 감정의 고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간 나오토 총리가 병합10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음. 신문은 이어 “한국의 학자와 시민단체는 총리담화에서 한일합병조약의 무효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했던 방위백서가 나올 경우 일한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음.
- 우익지인 산케이신문도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한국에서는 병합조약의 무효와 사죄,보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무성하지만 총리의 사죄담화 이후 (반일)여론이 진정되고 있다”면서 “최근의 양호한 일한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인지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측은 병합조약이 강제된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도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입장이어서 상호 견해차가 크지만 간 총리의 담화를 전면 부정하는 목소리는 적다”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전향적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음.
-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과 관련 ‘당시의 국제법에 비춰 유효했다’는 기존의 정부 공식 견해를 언급하지 않고 ‘봉인’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보도했음. 이는 ‘한일병합이 강제였으므로 무효’라고 반발하는 한국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병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정부 견해를 묻는 질문에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이미 무효’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여기에 뉘끼를 덧붙일 것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음.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2조의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의 ‘이미 무효’를 ‘원래는 유효하게 체결됐지만 한국의 독립으로 무효가 됐다’고 풀이하는 반면 한국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음.

#### ● 무토 日대사, “문화재 반환 구체적 범위 검토 중”(8/19)

-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61) 주한 일본대사는 19일 일제 식민시절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반환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무토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가진 연



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에서 언급된 조선왕실의궤 외에 어떤 문화재를 반환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가지로 조사 중”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간 총리의 담화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총리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는데 솔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무토 대사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좋은 파트너십과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자국도 하고 발전해왔다”면서 “한일은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의 운명공동체처럼 가는 것이 양국관계에 있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서로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한마디로 ‘국제화’라고 단언했음. 그는 “일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은 국제화를 일본보다 빨리 이뤘다”며 “삼성전자의 디지털화 도전을 비롯해 업계에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른 것 등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 무토 대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은 권력승계 과정에 있고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도 많이 해 몹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음. 그는 중국이나 북한이 요구하는 6자회담 개최에 대해 “6자회담을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며 “만일 6자회담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 북한에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토 대사는 강제 징용자나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그는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기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간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각방, 각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일본 내에서 논의해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무토 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후텐마 주일미군기지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는 최근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내가 알기론 없었다”고 말했다.

#### ● “韓 의원들, 日에 위안부 문제 등 논의 요구”(8/19)

- 한국 의원들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100년 담화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등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일본측에 전달했음.
-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한국 의원들은 19일 오후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일본 민주당 도이 류이치(土肥隆一) 중의원 의원 등에게 ‘간 총리에게 보내는 요망서’를 전달했음. 한국 의원들은 요망서에서 ▲일본측이 식민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하





고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동포, 원폭 피해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고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이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일본측이 과거 청산에 기반해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에 나서라고 요구했음.

- 이에 대해 일본측은 “간 담화가 발표된 것은 일보 전진이지만 내용 상으로는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양국 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논의해 나갈지 지혜를 짜내자”고 응답했음. 이후 양국 의원들은 간 총리의 담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 일관계를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토론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솔직해지고 싶다면 병합조약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측에서 김 의원과 장 의원 외에 민주당 강창일, 이낙연, 장세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측에서는 도이 의원 외에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이시게 에이코(石毛瑛子), 우부카타 유키오(生方幸夫) 의원과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당수와 아베 도모코(阿部知子) 의원, 공산당 아마시타 요시오(山下芳生)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고, 자민당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의원은 대리인을 보냈음.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환영사를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참석하지 않았음.

#### ● “日, 한국과 저개발국 공적원조 제휴”(8/17)

- 일본이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에서 한국, 브라질 등과 제휴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과 협조용자(차관공여)를 하기로 했음.
- 모잠비크 북부지역의 약 350km 도로 정비사업에서 일본은 사업비 260억엔 가운데 60억엔을 차관으로 공여하고, 한국과 모잠비크 정부가 50억엔, 아프리카개발은행이 150억엔을 각각 맡음. 공적개발원조에서 일본이 한국과 제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일본의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7.9% 감소한 6천187억엔으로 세계 1위 원조국이었던 1997년의 절반 정도임. 일본은 독자 원조에 따르는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 외에 브라질, 중국 등과도 제휴를 추진하고 있음.

#### ● “정부, ‘문화재 반환’ 협상준비 착수”(8/16)

- 정부가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밝힌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한반도 유래 도서 반환을 위한 협상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함. 정부 소식통은 16일 “조선왕실의궤 등의 반환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박영근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은 17일 회동,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을 문화재의 범위와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음. 현재 일본측은 문화재 반환을 위한 협상 제의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 협상은 한국측에서 외교부와 문화재청, 일본측에서 외무성과 궁내청 등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반환 범위와 관련해 일본은 간 총리 담화에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 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圖書)’라고 한정했음. 그러나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공권력에 의해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 범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또 문화재청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월 한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6만1천409점이 일본 국립박물관이나 대학, 사찰 등 250곳에 소장돼 있다는 1차 조사 결과를 얻었지만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음.

#### ● “日언론,李大통령 통일세 제안 주목”(8/16)

- 일본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과 3단계 통일론 발언에 큰 관심을 보였음. 아사히신문은 16일 ‘남북 통일세 검토’제하의 1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 미래의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전부터 독일 통일 등을 참고해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태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정부가 (통일세) 구상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또 “이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의 3단계 통일론을 제안했다”며 “임기후반에 들어가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 대화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요미우리신문도 ‘남북 3단계 통일 제창’제하의 국제면 톱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3단계 남북 통일론을 언급하고 통일세 도입을 제안했다”면서 “장래 남북 통일에 대비해 재원문제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음. 신문은 “한국정부는 독일이 통일비용으로 20년간 2조유로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통일세 도입에 대해 청와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비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와 후계체제 움직임 등 북한의 정세가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재원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라고 해석했음.
- 마이니치신문도 ‘남북통일세를 검토’제하의 국제면(6면) 머리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3단계 통일론과 통일비용 준비를 위한 통일세 검토를 제안했다”고 전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와 권력 승계에 의한 북한 정세의 급변을 전제로 한 제안이지만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관측했음.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



론과 통일세 발언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뜻이 있다”면서 “동시에 국민의 결속을 요구해 정권의 구심력을 높이는 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한편 일본 언론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일병합 100년 담화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일보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밝힌 부분을 부각시켰음. 아사히신문은 이 대통령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 10일 발표한 한일병합 100년 담화에 대해 “처음으로 한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했음. 일본의 일보 전진한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음.
- 요미우리신문도 이 대통령이 간 총리의 담화에 대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처음으로 반성 사죄한 것으로 일보 전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측이 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보도했음.
- 마이니치신문도 이 대통령이 간 총리의 담화를 ‘진일보한 일본의 노력’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대통령의 연설 22분 가운데 일본에 관한 것은 단 1분이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간 총리의 담화를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주문을 붙였다”고 보도했음.

## 라. 미·중 관계

### ● “中 남중국해서 신형 자주포 발사훈련”(8/21)

-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신형 수륙양용 자주포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가 20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 모 여단은 지난 11일 남중국해 해역에서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해 자주포 발사 훈련을 진행했음.
- 전차를 동원해 발사된 신형 자주포는 목표물의 위치와 풍속, 압력 등을 정확히 계산해 순식간에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훈련을 주도한 여단장은 “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투에 대비해 작전강도를 강화하고 자주포의 반응 속도를 높여 ‘발견 즉시 섬멸한다’는 전투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견제하면서 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적 전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과 베트남의 연합훈련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잇따라 실전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 “中외교부, 美 국방부보고서 비판”(8/19)

- 중국은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를 통해 자국의 군사력 확대를 비판한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문제의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을 과장하고 중국 위협론을 퍼뜨렸으며 중-미 양국군 간에 닥친 곤란한 문제를 중국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비판했음.
- 장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러한 보고서에 견결히 반대하며 미국 측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중국은 굳건히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있고 방어성 국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태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 장 대변인은 또 미국이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이런 보고서 발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미국이 양국군 관계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일을 많이 하고 상반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음. 앞서 중국 국방부 정옌성(耿雁生) 대변인은 이날 “이런 보고서를 내는 것은 중국과 미국 간 군사 교류 증진 등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가) 미국에 양국의 신뢰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나 행동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음.

### ● 中전문가 “美 무력시위는 초조·불안 탓”(8/18)

- 미국이 서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해 무력시위를 벌이려는 것은 경제적 영향력 약화로 초조하고 불안해진 상황 속에서 군사력을 앞세우려는 특수한 심리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중국에서 나왔음.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산하 미국연구소 위안펑(袁鵬)소장은 광저우일보(廣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외교·경제·문화 등의 방면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중국의 파워가 강화되자 초조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전통적 우방이던 일본과 대만의 군사적 지렛대가 약화되자 불안감이 심해졌고 이에 따라 베트남 등 새로운 지렛대가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
- 그는 또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한 심리적 조급함 속에서 때마침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지자 이를 계기로 무력시위를 벌인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과거에 보여왔던 자신감과 침착함의 표현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경제력의 약화를 만회하려는 초조한 심리상태를 반영한다고 풀이했음. 한편 중국사회과학원 펑자오쿠이(馮昭奎) 연구원은 17일자 환구시보(環球時報)에 기고한 시평에서 미국이 항모를 서해에 파견,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을 벌이려는 데는 중국을 해양 패권 다툼에 끌어들이려는 맞춤형 3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음. 그는 3대 함정으로 ▲ 미국 군수업자들이 무기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을 패권 쟁탈전에 끌어 들여야 필요성이 있고 ▲ 중국의 분노를 유발, 더 이상 경제성장에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며 ▲ 중국이 패권 쟁탈전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 주변 국가들에 위협을 주는 국가로 변모케 하려는 의도를 들었음.

#### ● “中언론, 한미 UFG연습에도 긴장”(8/16)

- 중국 언론들은 16일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루며 큰 관심을 보였음. 중국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는 16일 이번 훈련이 동해와 서해(중국명 황해)에서 실시된다고 보도하고 한미훈련이 지난 7월말 동해에서 끝난지 한달도 채 안 돼 다시 벌어진다고 의미를 부여했음. 신경보(新京報)도 이날 관영 신화통신 등을 종합해 이번 UFG가 동해와 서해에서 실시되며 무려 3만명의 미군과 5만6천명의 한국군이 참여하는 세계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의 하나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음.
- 중국 언론들은 UFG 연습과 관련,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담화내용도 같은 비중으로 다뤘음. 중국 언론이 컴퓨터를 이용한 지휘소연습(CPX)이며 연례행사인 UFG 연습에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오는 9월 서해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됐음.
- 베이징 당국은 이 서해 훈련에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되자 큰 반발을 보이고 있음.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핵심이익이 걸린 곳이라고 선포하고 한미연합 서해훈련에 수차례 반대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서해훈련 참가와 항모 파견을 결정하자 내심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중국 지도부는 미 항모의 서해 진입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으며 인민의 민족주의 감정과 정서가 표출되는 정도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내다봤음. 소식통들은 이어 베이징 당국이 서해를 핵심이익이라고 선포했고 서해 훈련에 강경 입장을 거듭 표명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 전략 수립에 탄력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음.

#### 마. 미·일 관계

##### ● “美日, 9월 유엔총회때 정상회담 추진”(8/21)

- 미국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하순 열리는 유엔총회때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음. 이 통신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20일 밤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와의 회담에서 벅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간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초 캐나다 G20 정상회의 당시 회담한바 있으며 11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임.
- 9월 유엔총회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오키나와(沖繩)현



의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임. 이외에 북한의 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 경제대책, 지구온난화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 후텐마 문제의 경우 미일 양국은 이달 말까지 미국이 원하고 있는 V자형의 활주로 2개안과 일본이 제안한 I자형 1개안을 병기한 전문가 보고서를 실행가능한 안으로 채택한뒤, 이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임.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이 이 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다 오키나와 지사 선거가 11월 하순 예정돼 있어 후텐마 이전의 구체적 공법과 나고(名護)시 캠프슈워브 지역의 이전부지 최종 결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음.

#### ● 日 “조어도 미-일 안보조약 대상”(8/19)

- 일본 정부는 18일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의 섬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며 동맹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언급한 섬은 동중국해의 무인도 조어도(釣魚島)임.
- 중국은 이 섬을 ‘다오위다오(釣魚島)’로, 일본은 ‘센카쿠(尖閣)제도’로 부름. 양국간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섬은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음.
- 고다마 가즈오(兒玉和夫)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우리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 섬을 다루는데 있어 입장이 변화했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앞서 교도통신이 워싱턴 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문제의 섬이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한 보도를 겨냥한 것임.
- 교도는 이 같은 입장 전환은 조어를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음. 그러나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섬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도통신의 보도를 부인했음. 이 섬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고다마 보도관은 “이 섬들이 공격을 당할 때 일본과 미국이 함께 대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 바. 중·일 관계

##### ● “중학계 ‘오키나와는 중국땅’ 논문 급증”(8/18)

- 중국에서 최근 몇 년새 학계를 중심으로 오키나와(沖繩)가 중국 땅이라며 반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오키나와가 류큐(琉球)왕국이었던 시절 중국과의 교역으로 번성했고, 중국에 종속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중국 영토라는 주장



이 늘고 있음.

-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역사학자 심포지엄에서는 메이지(明治) 정부에 의한 1879년의 류큐 병합, 2차 세계대전 후인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분출했음. 이 세미나를 주최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인 쉬용(徐勇) 베이징대 교수는 중일관계 전문가로 중일 역사공동연구의 중국측 위원을 지낸 유력한 연구자임. 류큐대학의 가미사토 겐이치(上里賢一) 명예교수는 “쉬용 교수는 과격한 반일 학자가 아님에도 이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도, 중국 공산당도 공식견해와 다른 이런 주장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음.
- 전문가들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오키나와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많았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가 지난 2006년 이후 다시 20여편의 논문이 쏟아졌음. 중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알력을 빚으면서 동맹관계에 금이 가고 있고, 일본 정부에 대한 오키나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틈을 노린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해석했음.
- 이 신문에 의하면 중국의 마오쩌둥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간행한 논문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에서 오키나와에 대해 “제국주의 국가가 강탈한 중국의 많은 속국과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했음.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간행된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손질이 가해졌고 오키나와라는 지명도 언급되지 않았음.

## 사. 기 타

### ● “中 항공모함 자체 건조 시간문제” <교도> (8/22)

- 중국의 항공모함 자체 건조가 임박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음. 미국은 중국이 연내에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공식 전망했지만 중국 정부는 군사비밀 운운하며 이 같은 계획을 부인해왔음. 교도통신 기사는 상하이(上海) 인근 창싱다오(長興島)를 방문, 현장 노동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항모 건조가 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중국 조선소 노동자는 교도통신 기자에게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국내 건조 시작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음.
- 한 노동자는 “항모 건조는 3번 드라이독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음. 자신을 8t 트럭 운전사라도 소개한 한 노동자는 “항모를 건조할 재료를 3번 드라이독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음. 160km<sup>2</sup>에 달하는 창싱다오는 5개의 거대 드라이독을 보유하고 있음. 외견상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3번 드라이독에는 대형 경비초소가 운영되고 있음. 강남조선유한책임공사라는 조선사 이름이 새겨진 입구 근처에 들고 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음. 3번



드라이독 뒤에는 25층 높이의 원형 타워가 있는데 현지인들은 이를 ‘본부’라 부르고 있음. 다른 노동자는 “항모 건조가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약 3천명의 노동자가 3번 드라이독에 고용돼 있는데 다른 독의 노동자들은 3번 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전했다.

- 2번 드라이독 외부에는 아파트 몇 개 동이 있었음. 이 중 몇 동이 더 세련돼 보였는데 현지 주민들은 이곳이 강남조선 고위관계자들과 외국인 기술자들이 머물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의 군사전문가인 핑커푸(平價夫)는 3번 독에서 항모 건조를 도울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이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부터 항모 건조 기술을 보유해왔음. 아파트 인근에서 과일 행상을 하는 중국 여성은 “7월부터 금발의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언급, 군사전문가 핑의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음.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안보 발전 평가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지상발사 미사일, 공격용 핵잠수함 증강, 항공모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특히 중국이 올 연말 이내에 항모 건조 등을 시작할 가능성을 제기했음.

#### ● 中, 함정공격용 수중무기 실험 공개(8/22)

-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최근 함정 공격용 수중무기 성능실험을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인터넷사이트인 신화망이 22일 보도했음. 이 통신은 실험 장소가 대해(大海)의 수심이 깊은 곳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았음. 통신은 함정 부근에서 대형 수중폭발이 일어나는 사진을 실은 채 자사 기사가 실험을 직접 참관했다고 전했다.
- 실험 대상이 된 수중 무기 역시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뢰, 수뢰, 심해저폭탄 등 수심중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처럼 함정 공격용 수중무기 실험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임.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이를 겨냥한 성능실험 훈련이라는 지적도 나옴.
- 신화통신은 해군의 모 수중병기실험연구소가 주도한 이번 실험에는 해군의 여러 관련부대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실험은 먼저 다량의 수중무기를 해역에 뿌리고 수직상승이 가능한 항공기를 동원해 상황을 살피는 가운데 수중무기 해체 함정을 투입해 무기 성능 측정장비로 각 수중무기의 성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
- 앞서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중국 해군 모 여단이 지난 11일 남중국해에서 실제 전투상황을 가정해 신형 수륙양용 자주포 발사 훈련을 했다고 지난 20일 보도했음. 이 훈련은 남중국해에서의 국지적 전투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동·서해 합동군사훈련과 미국과 베트남의 연





합훈련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실전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 “한·EU FTA 내달 중순께 공식 서명”(8/18)

-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EU 외무장관 이사회가 내달 10일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한·EU FTA 문제를 논의해 공식 서명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이후 적절한 시기에 양측간 공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을 의결했으며 앞으로 대통령이 이에 결재하면 공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됨.
-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의 다른 당국자는 “한국과 EU 양측이 공식 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내달 중순께 공식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후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연내에 잠정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 EU는 27개국 연합으로 이뤄져 있어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선 EU 의회의 비준동의에 이어 27개국 개별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개별 국가 의회의 비준동의를 마칠 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한국과 EU는 한국 의회와 EU 의회가 비준동의하면 한·EU FTA를 잠정발효키로 하고 이미 이를 협정문에 명기했음.
- 정부 당국자는 “잠정 발효라고 하더라도 공식 발효와 별 차이가 없다”면서 “협정내용의 99% 이상이 곧바로 적용되며 EU 의회에 위임되지 않은 몇 개 조항만 각 국의 비준동의를 마쳐야 효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 ● “볼리비아 리튬 개발 기본합의서 서명문제 논의”(8/17)

- 한국과 볼리비아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리튬 개발 및 기술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볼리비아와 그동안 리튬 개발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특히 이달 말 2박3일로 예정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방한시 심도 있는 협의를 기대하며, 기본합의서 체결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합의서 서명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기본적으로 볼리비아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볼리비아 과학위원회와 ‘리튬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리튬 개발을 위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이와 관련, 김신중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실무 협상단이 지난 10일 볼리비아로 건너가 현재 리튬 개발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



려졌음. 정부는 지난 해 9월과 10월에 이어 올해 1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보내 리튬 개발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해왔음.

- 볼리비아 서부의 우유니 호수에는 세계 리튬 자원의 절반이 묻혀 있으며, 개발권을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 브라질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음. 리튬은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핵심 원료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 <이명박정부 반환점> ⑫글로벌외교·남북관계(8/22)

- 지난 2년 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는 ‘글로벌 외교역량’ 강화로 요약됨.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은 주요국과의 동맹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등 외교전선에서 빛을 발했음.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국제무대에서 확인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임. 하지만, 북핵 문제와 천안함 사태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큰 도전임.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줄곧 험난한 위기와 도전 속에 ‘한반도 리스크’를 상기시켰음.
- ◇글로벌 외교의 성과 = 한국 외교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은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됐음.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임. 이를 바탕으로 7월21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한편 동맹 협력을 양자적, 지역적, 범세계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음.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한 것도 굳건한 동맹관계가 바탕이 됐다는 평가임. 일본과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신시대 개척’, 중국 및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변 4강과의 외교적 지평을 넓혔음.
- 과거사 정리 및 독도 문제 등 폭발성이 여전하지만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의 뜻에 반했다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면서 건전한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음.
- 동아시아 외교도 오세아니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광의의 아시아 지역협력으로 확대시켜 주변 4강에 한정됐던 지역협력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임. 또 ‘글로벌 코리아’를 내걸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임.
-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와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유치 등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말해줌. 지난해 11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도움을 받던 나라



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국격을 높였음. 정부는 올해를 공적개발 원조(ODA)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규모를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 0.25%로 점진적으로 증대한다는 계획임.

-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 참여법을 제정, 평화유지군을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기여외교의 일환임. 정부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 경호를 담당할 ‘오쉬노’ 부대를 파병하는 등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과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의 지난해 말 400억 달러 규모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 경제, 자원외교도 성과를 냈음.
- 그러나 한국 외교가 직면한 도전 또한 만만치 않음. 천안함 사태 여파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서해 상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서는 냉전시대의 대결구도가 부각되고 있음.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앞으로 미·중 간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한·미 및 한·중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음.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는 한국 외교의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음.
- ◇과제남긴 북핵·남북관계 = 정부 출범부터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았음.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젠, 한반도 신평화구상 등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했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지난해 하반기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작업까지 벌였지만 천안함 사태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음.
-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약속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은 ‘날조극’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지나친 원칙에 입각한 경직성으로 그동안 일궈놓은 화해협력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놓고 있음.
-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기초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 정부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음. 북측으로서는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남측으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민심을 다잡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측의 대북지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임. 북측이 지난해 하반기 우리 측에 정상회담을 계속 타진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단절에 따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천안함 사태 등 남북관계 단절의 원인을 북측이 제공한 측면도 크지만 남북 관계를 이대로 가져갈 경우 한반도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임기 내내 남북관계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즈음 남북이 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극적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북핵 문제의 경우 천안함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더욱 꼬여버렸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핵 교착상태가 적어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오는 11월까지의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후계구도 구축도 북측이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 향후 6자회담 가동이 남북관계를 뚫는 계기가 될지 주목됨. 올 하반기나 내년 초 현재의 천안함 국면을 비핵화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 의미 있는 전략적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6자회담은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라며 "천안함 사태를 짚고 가는 가되 이와는 별도로 6자회담을 재개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음.

#### ● <이명박정부 반환점> ⑭美中日 전문가 평가(8/22)

-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신뢰받는 중견국가로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일치된 평가를 내렸음. 하지만 대북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느냐는 질문에는 유보적인 평가들이 많았음.
- 현재의 한미, 한일 관계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좋은 상태로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중국의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중 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음.
- 뉴욕대 국제정치학 교수를 지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어퍼 수석 부회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총평했음. 노어퍼 부회장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사상 첫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 등을 성과로 거론하며 "한미 동맹의 견지에서 볼 때 두 나라는 냉전 종식 후 가장 강고한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도 이 대통령의 대미(對美) 전략에 대해 "불평을 제기하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별로 없다"고 말했음. 앨런 롬버그 헨리 스텐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쌓은 친밀함은 놀랄만한 것이며, 두 정상의 관계는 양국 정부 전반의 유대를 강화시켰다"고 전제한 뒤 "국가 정책



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추동되지만, 어떤 지도자이나에 따라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며 “대표적인 경우가 현재의 한미 관계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와세다대 교수는 “일미관계가 불안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미 관계는 이 대통령의 역량 덕에 훨씬 공고해진 게 사실”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일·미·한 동맹이 공고해진 것은 이명박 정권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극찬했음. 일본 전문가들은 한일관계도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음. 보수 성향의 시게무라 교수는 물론, 진보 성향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도 이 점에선 평가가 일치했음.
- 다만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초기에는 순조롭게 발전했지만 천안함 사태와 한미 군사훈련 등을 놓고 볼 때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음. 진찬룡(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한중 관계는 비교적 평온하게 발전해 왔고 집권 초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면서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전혀 믿지 않은 채 군사훈련 등 지나친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음.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스나이더 소장은 “아직 그다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롬버그 연구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음. 롬버그 연구원은 하지만 “앞으로 이 대통령이 실용적인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이 최소한의 온건한 협력적 태도를 보인다면 남북한 긴장을 낮추고 비핵화 논의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 와다 교수는 “일한(한일)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대북 관계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최근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북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힘으로 압박하려는 건 좋지 않다”고 비판적 조언을 했음.
- 시게무라 교수도 “이 대통령이 적어도 ‘북한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대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대북정책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음.
-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대체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컸음.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장롄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과거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른 것”이라면서 “북한에 일방적인 지원을 보내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천안



함 사건 이후 기본적으로 제재와 한미동맹강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한반도 정세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음.

- 시게무라 교수는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일본과 미국을 배경으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일·한·미 동맹은 중국과 대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과 대등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문했음.
- 롬버그 연구원은 “싸움이 난무하는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어젠다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리더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음. 와다 교수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한동안 긴장되는 건 피할 수 없고, 이 대통령은 최악의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직접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기 어렵다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통해 북한에 손을 내미는 방법도 있다”고 고언했음.
-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힘을 합쳐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에도 속도를 내게 되길 공통적으로 기대했음. 진찬룡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조속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나서고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3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 <인터뷰> 무토 주한 일본대사(연합뉴스, 8/19)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는 19일 한일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지향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처럼 가는 것이 양국관계에도 좋고 서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토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경의를 갖고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무토 대사는 지난 5일 부임 전에도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4차례 근무했다. 외무성 동북아시아과장을 역임한 한반도 전문가로 한국어에도 능통하다. 이날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됐다.

다음은 무토 대사와 일문일답.

--한국에 부임한 소감은.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게 1975년이였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한국 발전의 역사, 한일관계 발전의 역사였다. 한일관계도 교류를 바탕으로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됐다. 매우 감명깊다. 한일 합병에서 시작된 지난 한일관계 100년의 마지막 대사이자 새로운 100년의 첫번째 대사가 됐다. 이 시기에 한국으로 올 수있었던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신문 칼럼에서 “앞으로는 일본이 한국의 변화를 보고 배우는 점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한마디로 ‘국제화’다. 한국은 일본보다 국제화를 빨리 이뤘다고 생각한다. 영어 교육이나 해외 유학을 봐도 그렇고, 삼성 등 기업은 디지털화에 첫번째로 도전한 회사다. 산업계에서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고 시대에 맞는 경영을 해왔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수출이 많은데 비해 한국은 중국이나 인도, 아시아 국가 등 신흥국들에 맞는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시대에 맞는 국가경영과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에 있어 앞으로의 100년은 어떻게 돼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과 한국과 일본은 좋은 파트너십과 경쟁을 통해서 서로 자극하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 또 북한문제, 환경, 에너지 개발, WTO 등 무역문제, 금융개혁 및 안정 면에서 협력할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파트너라 생각한다.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그것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처럼 가는 것이 양국관계에도 좋고, 서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한다. 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경의를 갖고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웃나라로서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양국간 쟁점은 가능한 범위 내로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간 나오토 총리가 발표한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보다는 진일보했으나 한일조약의 불법성이나 위안부 배상문제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간 총리의 담화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담화에서는 구체적 사안을 넣지 않았다.

담화는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는데 솔직하고자 합니다. 또 식민지 지배로 인한 대단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여기서 다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담화에는 총리의 만감이 교차하는 뜻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한국에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에 대해 그런 마음을 표시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런 만감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과거 징용피해 보상과 위안부 배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개인에 대한 청구문제는 법적으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다. 다만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인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해왔다고 본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 번영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일본 역시 평화와 안정 속에서 번영을 원하니까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 우리도 미안하다는 마음은 총리께서 표명하셨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번영속에서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반환과 관련,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는.

▲구체적인 범위는 검토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일단 100년 간의 길목에 이른 해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담화에서 말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한국 정부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권력 계승





과정에 있어서 경제 정책에서 실패도 많이 했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북한 정세는 불확실성이 극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잘 협조해서 같은 방침과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북한의 평화를 이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방북했을 때 발표한 평양 선언에 입각해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과거 청산도 하면서 국교 정상화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 방침이다. 그 방침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이뤄지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강력한 반대 표명을 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도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과 긴밀히 연락해서 적어도 훈련의 목적을 알고 있는게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한다. 지금 6자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6자회담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6자 회담 한다면 어떤 진전이 있는지, 달성하고픈 목적이 뭔지 명백히 북한한테 알려줘야 한다.

--독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생각인가.

▲저는 다케시마라고 해야 한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 안다. 어쨌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큰 입장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입장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단 상태에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상(FTA) 재개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마지막 FTA 교섭이 2004년 11월쯤이었다. 그동안 한일 경제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우선 한국경제가 굉장히 힘있는 경제가 됐다. 각론에서 여러 의견이 있고 일본 상품의 한국 시장 점유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한국 경제의 힘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지금 환율 수준을 보면 유리한 입장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힘을 보면 더 공격적으로 일본 시장을 공격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파트너십과 라이벌(partnership and rivalry)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움은 있지만 전체적인 합의 의사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한 전망은.

▲한국에서 기대가 많다는 건 알고 있다. 간 총리께서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각방, 각파에서 제대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저도 일본 내에서 여러 의논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후텐마 주일미군기지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는 최근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내가 알기론 없었다. 그런 사실 모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일본에서 열린 월폭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했는데, 일본내 반응은.

▲반 총장께서는 일본에서도 인기도 있고, 우리 감정도 잘 이해해준다. 아주 기대감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반 총장님을 존경한다.

(nomad@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8/19/0503000000AKR20100819183000043.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